유통 빅3 빅매치…광주 복합쇼핑몰 2곳 이상 들어서나

현대 이어 신세계도 계획 공식 발표…롯데도 ‘만지작’
市 “기업 투자 의사 확대해석 말라…내주 입장 발표”
姜시장, SNS 통해 “누릴 기회 넘쳐나는 광주 만들것”

신세계그룹이 17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 ‘스타필드’ 건립을 발표하면서 광주지역에 2곳 이상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이 발표한 2개 부지가 민선 8기 핵심 현안에도 포함돼 있어 만약 성사될 경우 광주시의 핵심 현안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날 “쇼핑·문화·레저·엔터에 휴양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정통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가칭)’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현대백화점그룹은 광주에서 가장 먼저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부동산 개발기업인 휴먼스홀딩스 제1차PFV와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약 31만㎡(9만3천700평)에 미래형 문화복합몰 가칭 ‘더현대 광주’를 건립할 계획이다.

유통 ‘빅3’ 중 남은 롯데그룹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유통 3사가 모두 광주 복합쇼핑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이 복합쇼핑몰을 공식화하면서 민선 8기 광주시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양수겸장’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밀린숙제 5+1’로 규정한 전남·일신방직 부지는 물론, 17년 째 답보 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부지를 민간기업이 해결하겠다고 특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세계그룹은 어등산 부지가 현재 광주시와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소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2005년 계획수립 이후 건설업체들의 협약과 파기가 반복되다 2019년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7일 오전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부지에 복합쇼핑몰(스타필드 광주)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지난해 8월 시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시를 상대로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으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19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 줬다. 서진건설은 지난 5월24일 항소한 상태다.

복합쇼핑몰과 관련, 광주시는 이날 원론적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이영동 대변인 명의로 “민간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광주시와 연계,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며 “기업의 발표 내용 등을 포함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며 고민 중에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이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 추진 계획을 밝힌 광주시에 투자 의향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의 ‘복합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누릴 기회가 넘쳐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광주는 인구 15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유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유통 3사가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이르면 다음주 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현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실제 이뤄질지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며 “특히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지켜봐야 하겠지만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에 광주시의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박용진 “견제와 균형, 새로운 출발 만들어달라”

“당헌 80조 개정 반대…민형배 의원 복당은 위험천만한 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17일 “민주당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 한 계파나 인물의 독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당화의 길을 만들어줘서는 안된다”며 “광주와 호남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서울과 수도권의 많은 당원들이 균형감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당헌 80조가 야당 탄압의 루트라면서 개정에 찬성한다. 이제 하다하다 당헌으로 개정하려고, 동지를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혁신안으로 만든 것이 당헌 80조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이 야당 탄압 루트를 놓은 것인가”라며 “아전인수, 내로남불이 거듭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박 후보는 “강성 지지층 뒤에 숨고 ‘개딸’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나 무원칙을 당원들의 당원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라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염치가 있어야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국민들 상식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 박 후보는 “이 후보는 당을 위해 한 일이니 복귀시켜야 한다는 데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헌재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민주적 절차 과정 훼손인데 복귀를 시킨다는 것은 헌재 재판관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을 지지해줬던 분들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민주당을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민주당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전남 청년 정치인들 “민주당 개혁해야”

“정치권력 연명하는 정치로 미래 바꿀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 청년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수훈 광주시의원과 5개 자치구 구의원 등 청년 정치인들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치인들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민생과 개혁, 미래는 없고 오로지 계파와 줄 세우기로 편을 가르고 있다”며 “이렇게 가는 길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다시 또 지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다당제 정치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지방소멸 대응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 ▲그린뉴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와 고민 등을 토론을 통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청년 정치인들은 “민심이 떠난 것에 대한 반성과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정치권력 만을 연명하는 정치는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며 “지금의 지지율도 결코 잘하고 있어서 밀어주는 것이 아닌 제발 잘하라는 의미에서 선택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민주당 소속 현 광주시의원·기초의원과 최용선·박노원·최치현·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도민 안전 위협 시설 관리 강화

전남도는 17일 “도민생활 밀접시설 및 노후·위험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2개월 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중점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시설물 1천721개소다.

특히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기관 주도의 안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관리주체가 합동으로 참여해 이뤄진다. /김재정 기자

북구의회, 전국 첫 ‘영상 입법예고제’ 실시

의원발의 조례안 설명 영상 제작…입법 활성화 기대

광주 북구의회는 17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직접 소개하는 ‘영상 입법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입법 내용을 미리 게시해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입법예고는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조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구의회는 ‘영상 입법예고제’를 도입, 생소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 등에 송출할 계획이다.

‘영상 입법예고제’는 조례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을 통한 주민 참여와 의원들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수 의장은 “영상 입법예고제는 북구의회가 전국 의회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희 기자